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3호 (2023.10.13)

## ■ 이 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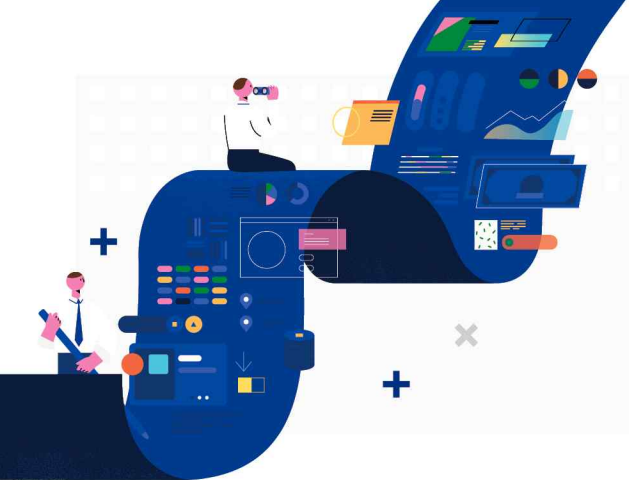
(노동)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과  
인천시 시사점

##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 국내 정책동향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3호 (2023.10.13)

## Cotents

### I. 이 슈

(노동)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과 인천시 시사점 ..... 1

###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 10

### III. 국내 정책동향

(산업)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확대 방안 발표 ..... 11

(주거) 정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 11

(산업) 해양수산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 12

(창업)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 25억 원으로 확대 ..... 12

(산업) 정부,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등 수출 확대 지원 ..... 13

(규제) 이차전지, 모빌리티 분야 등 기업규제 개선방안 발표 ..... 13

(산업)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 확정 및 스마트도시 관련 지원사업 승인 · 14

(복지) 고용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 14

#### 연구진

<b>최태림</b>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b>민규량</b>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b>상민경</b>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b>김현철</b>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b>김효영</b>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 노동 >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과 인천시 시사점



#해외 고급인력 #전문인력 확보 #신산업 #기술패권 #인재 중요성

- 최근 국제적으로 신기술 개발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유치에 대한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주요국 정부는 전문인력의 유인을 위한 정책을 발표
  - 노동인구의 고령화, 숙련 인력 감소, 국제 기술패권 경쟁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경쟁이 심화
    - 2000년대 초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선진입한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내 부족 인력을 대체하고, IT·의료·교육 등 전문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에 대한 적극적 개방정책을 실시
  - 4차 산업혁명 이후 주요국 정부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해외 전문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인력 유치 경쟁이 점차 전 세계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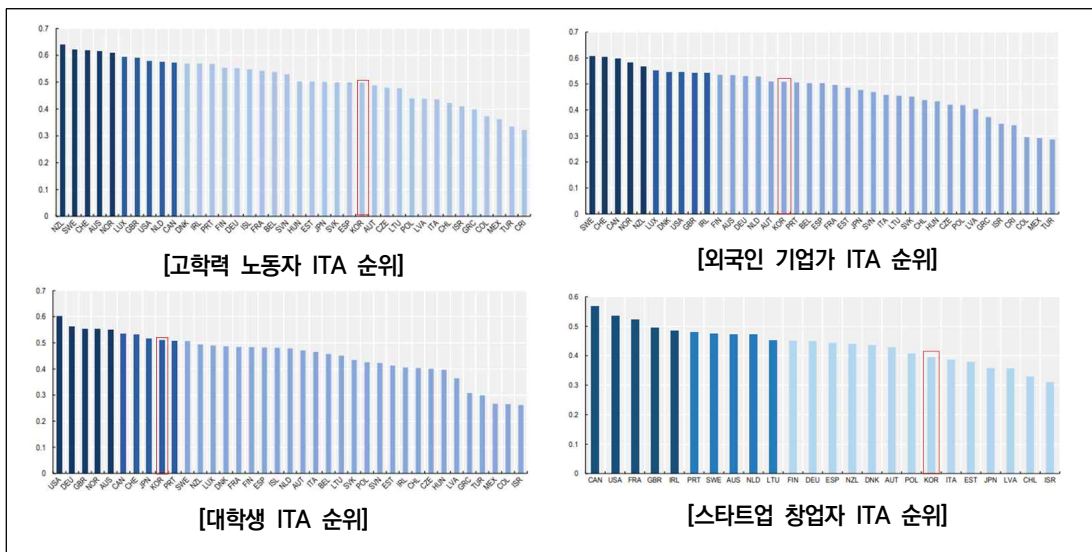
[표 1] 주요국 전문인력 유치 관련 정책

국가	정책	주요 내용
미국	Biden-Harris Administration Actions(202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非)이민 BridgeUSA 교환방문객의 과학기술분야(STEM) 연구 참여를 지원하는 Early Career STEM Research Initiative 시행</li> <li>• STEM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OPT) 22개 전공 추가</li> <li>• '특별능력(O-1A)' 비(非)이민자 관련 정책 개선 등</li> </ul>
호주	Global Talent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분야에서 호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비자(Global Talent Visa) 운영</li> </ul>
	Global Talent Employer Sponsored program(G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주의 호주 노동자나 다른 정규 비자 프로그램으로 채용할 수 없는 고숙련 해외인력 채용을 지원</li> </ul>
독일	Blue Card EU(유럽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계약서상 최저 연봉기준 하향, 고용계약기간 기준 6개월 단축 등 Blue Card 발급기준 완화('16~)</li> </ul>
	The new Skilled Immigration Act(FE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있는 지원자의 독일 취업을 위한 1년(갱신) 체류허가를 제공하는 점수제 기반의 'Opportunity Card' 운영</li> <li>• 직업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위한 이민 자격 완화 등</li> </ul>
일본	고숙련 외국인 전문가 포인트 제도('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도가 필요한 전문 분야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학력·경력·연봉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수치 이상인 사람에게 이민 우대</li> </ul>
	고숙련 외국 전문가 그린카드 제도('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 외국 전문가 1년 체류 시 일본 영주권 신청 가능</li> </ul>
중국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정보통신, 제조업, 첨단신소재 등 전략 핵심분야 인재 유치 정책 강화</li> </ul>
	해외 인재비자제도(R v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고숙련 외국 인재에 대한 비자제도 운영</li> </ul>
캐나다	Tech Talent Strate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업허가 발급요건 완화</li> <li>• Global Skills Strategy, Start-up Visa Program 참여 고숙련 기술자에 대한 혜택 개선 등</li> </ul>

\* 자료 : 각국 정부·대사관 홈페이지 및 한국경제인연합회(2022.12), 정책 기사 등 참고 및 재구성

○ 2023년 3월,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인재 매력도 지수(Indicators of Talent Attractiveness, ITA)’는 고학력 노동자, 외국인 기업가, 스타트업 창업자 등의 인재 유형에서 모두 중하위권 수준으로, 유럽 및 북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

- OECD의 ITA는 인재의 유치·유지와 관련한 국가별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기획의 질 △소득 및 세금 △미래 전망 △가족 환경 △기술환경 △포용성 △삶의 질의 7개 영역에 대한 평가에 비자 및 입국 정책, 의료 시스템 성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지수를 도출<sup>1)</sup>
- 인재의 유치 및 유지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이민정책 개방성과 국제적인 인재를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며, 매력도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능력 등 넓은 의미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름
- 2023년 3월 발표한 국가별 ITA는 ‘인재’를 고학력 노동자, 외국인 기업가, 대학생, 스타트업 창업자 등 4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평가
- 우리나라는 대학생 부문이 37개국 중 9위(0.51), 고학력 노동자 부문 38개국 중 25위(0.50), 외국인 기업가 부문 37개국 중 16위(0.51), 스타트업 창업자 24개국 중 18위(0.40) 수준으로, 인재 매력도가 낮은 편<sup>2)</sup>
- 우리나라의 카테고리별 ITA는 평가 항목 중 기술환경 분야는 양호(0.6 이상)하나, 기획의 질(0.55 이하), 포용성(0.5 이하) 등에서 낮은 평가



\* 자료 : OECD(2023.03)

\* 주 : 한국의 순위를 붉은색 상자로 표기

[그림 1] 2023 국가별 인재 매력도 지수(ITA)

- 1) ①기획의 질 : 이민자 실업률, 계약직 및 일용직 이민자 수, 고용보장 강제성, 무역 개방성, 세계 500위 대학 순위, 유니콘기업 수, 공유공간 수 등 ②소득 및 세금 : 고학력자 임금, 물가, 세금 부담, 숙련 노동자 임금, 내외국인 대학등록비 차이, 벤처캐피탈 접근성 등 ③미래 전망 : 2050년 부양비율, 임시-영구 변환 용이성, 국적 취득, 개인비자 기한 등 ④가족 환경 : 배우자의 이민 및 취업권리, 이민자녀의 영주권 취득 용이성, PISA 점수, 공공지출 등 ⑤기술 환경 : 영어능력, R&D 총지출, 특허수(IP5), 사이버보안 등 ⑥포용성 : 고학력 이민자 비율, 이민허용지수, 젠더평등지수, 기업내 여성임원 비율 등 ⑦삶의 질 :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⑧비자 및 입국 정책 : 비자 거부율, 비자 발급 시간, 일자리 생성 요건, 외국인 학생 비율, 스타트업 비자 여부 등 ⑨의료 시스템 성과 : 본인부담 의료지출비,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
- 2) 2019년 우리나라 ITA는 고학력 노동자 부문 23/35, 기업가 부문 14/25, 대학생 부문 16/35 수준이었음.

-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은 주로 단순기능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비자·영주권·국적 등과 관련한 제도의 폐쇄성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데 취약요인으로 작용
  -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총 449,402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하였는데, 이중 약 88.7%가 단순기능인력(E-9, H-2 등)에 해당하며 전문인력 취업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전체의 약 2.3% 수준인 50,781명으로 매우 소수에 불과
    -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영주권 제도 △외국 전문인력 비자의 까다로운 발급요건 및 절차 △해외 인재에 대한 세금 제도 △자녀 교육 문제 △금용 및 행정서비스 등 정주 여건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글로벌 인재의 유지력이 미약한 수준<sup>3)</sup>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약 35.8%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재외동포)의 경험에 따르면 △자녀교육, 증빙서류, 인터넷 업무 등 법적 문제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차별적인 문화적 문제 △학연·지연·상명하복 등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 거주에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재외동포재단, 2017)
    - 국내 이민정책은 △외교부(재외동포청)<sup>4)</sup> △고용노동부(비전문 외국인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 및 비자발급) 등 부문별로 담당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존재
  -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 및 정주에 대한 지원 역시 미진하여, 유학인재가 취업 등을 통해 국내에 정착할 유인이 낮은 것으로 확인<sup>5)</sup>
    - 교육부('23.08)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유학인재의 졸업 후 진로는 '본국귀국(29%)', '국내진학(11%)', '국내취업(8%)' 순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 비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
    - 외국인 유학생은 높은 취업 의사<sup>6)</sup>에도 불구하고 취업정보 부족 및 유학생 비자 활동 제한으로 인해 현장실습·인턴십 등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 측면에서는 국내 유학생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일자리 매칭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이에 최근 우리나라 역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 비자(특정활동 E-7) △외국인 창업자 비자(기술창업 D-8-4) △외국인 대학생 비자(유학생 D-2) 등 비자 제도를 개선·신설하는 등 까다로운 비자발급 요건 및 절차,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기준 등을 개선하며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
  - 2021년 12월 법무부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및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를 개소함과 동시에 외국인 비자제도를 개선
    - 동 센터에서는 대덕특구 내 외국인 유학생, 전문직 종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 및 국적 상담 등 출입국행정 전반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

3) 전경련(2022.12), 매일경제(2020.12), 매일경제(2023.06) 등.

4)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대체로 재외동포 자녀 및 단순근로 취업에 관한 내용이라 본 이슈에서는 다루지 않음. 재외동포청의 경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서비스 △교육문화 지원사업 △현지정착 지원사업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유치와 관련한 정책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

5) 국내 유학생은 2022년 말 기준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 약 8.8%에 해당하는 197,234명 수준.

6) 교육부('23.08)는 2023년 전북대 윤영숙 교수팀의 정책연구를 인용하며, 국내 유학생의 대학원 졸업 후 국내 진학 또는 취업 희망 비율이 약 55.5% 수준임을 언급.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최대 5년간 자유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F-2)을 부여하여 우수 인재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
- 2022년 7월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sup>7)</sup>
- 동 사업에서는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의 의무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하고, 규정 위반 시 비자를 취소
- 2023년 6월 개소한 '재외동포청'에서는 국내외 재외동포를 위해 △자녀의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출입국·체류 관련 제도 정비 △모국 귀환 시의 연금·보험 개선 검토 △재외동포 인식 개선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
- 이 외에도 외국인 전문인력 관련 비자 제도를 [표 2]와 같이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하며,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표 2] 국내 전문인력 유치 관련 정책

발표 일자	구분	목표	주요 내용
2021.12	거주자격(F-2) 비자 관련 개선 (법무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국내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전문인력 출입국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 개소</li> <li>•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 취득 유학생 등 외국인에게 최대 5년간 자유로운 거주 자격(F-2, F-2-7S) 부여</li> <li>• 유망산업분야의 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 취업(예정자)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관계없는 거주 자격(F-2) 부여</li> </ul>
2022.04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개선 (법무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쿼터제도 폐지 및 내국인 근로자의 10% 이내 외국인 고용 허용</li> <li>• 국내 선박 도장 관련 학과 학생이 기량검증 통과 시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 확대 적용</li> <li>• 외국인 도장공 및 전기공의 기량검증 통과 경력요건 완화</li> <li>• 용접공 도입 절차 간소화</li> </ul>
2022.08	첨단분야 <sup>8)</sup> 외국인 인턴(D-10-3) 비자 신설 (법무부)	미래 우수 인재 선제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우수대학<sup>9)</sup> 첨단기술 분야 전공 재학생의 유망 산업 분야 국내 기업 인턴 활동 허용</li> <li>• 내국인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 6개월 범위 내 제한</li> <li>• 국내대학 유학 희망 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취업비자·창업비자 변경 우대</li> </ul>

7) 시범사업은 부산(3곳), 대구(1곳), 경기(2곳), 충북(1곳), 충남(2곳), 전북(3곳), 전남(3곳), 경북(5곳), 경남(1곳) 등 9개 시도의 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3.10.03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올 2월 기준 전북과 경북이 각각 400명, 229명의 외국인력을 확보(서울Pn, 2023.02.09).

8) 첨단기술분야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을 의미.

9) 국외 우수대학이란 Time지(誌) 선정 세계 200대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의 해외 대학을 의미.

#### 4 •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2022.12	첨단분야 네거티브 방식(E-7-S) 비자 신설 및 전문인력(E-7) 비자 요건 완화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신설</li> <li>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li> <li>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 완화</li> <li>국내 복귀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 완화 및 호텔업계 고용 외국인 비자 발급 대상 인원 확대</li> </ul>
2023.08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교육부)	해외 우수인재 확보 및 지역 학령인구 감소 돌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검토 △비자유건 개선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 관문의 확장</li> <li>지역 수요맞춤형 인재 유치·정주를 위한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유치·양성·취업 지원 실시</li> <li>첨단·신기술 인재 유치 목적 재정 지원 확대 및 글로벌 연구·교수 인력 유치</li> <li>유학생 네트워크, 재외동포인재 DB 구축 등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외 인재 선순환 구조 마련</li> </ul>
2023.08	외국 전문인력 관련 비자 제도 개선 (법무부)	숙련 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관련 비자 킬러규제 혁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의 전환쿼터를 35,000명으로 확대 및 일정기간 근무 의무화</li> <li>△유학생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조선업체 현장 교육 수료 유학생의 전문인력(E-7) 자격 변경 허용 △유학생 지역특화 비자 확대 및 체계화를 통한 유학생 취업 여건 개선</li> <li>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부여하여 우수인재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안정적 정착 지원</li> </ul>
2023.09	이주배경학생 인재 양성 지원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내 교육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초·중·고 학교의 한국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대학 연계 및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확대</li> <li>지역대학의 유연한 학사제도(학사·학귀제도, 계약정원제도 등)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li> <li>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li> </ul>

\* 자료 : 정부 보도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인천시는 항공 및 물류를 통한 입국 관문으로서의 입지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재외동포청, 글로벌 캠퍼스 등 해외 전문인력에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도시이므로, 지역적 이점 및 특성을 살려 지역 체류 유학생 및 재외동포의 유치·정주를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 인천시는 △교육(송도 글로벌 캠퍼스) △산업(송도·영종·청라를 잇는 경제자유구역) △교통(인천공항·인천항) 등 외국인 유학생 및 전문인력, 예비 창업자 등 해외 우수인재를 유인할 요소가 많은 지역으로, 지역 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인 상황
  - 현재 인천은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인 반도체, 항공 MRO, 의약·바이오 등 지식·기술집약적인 산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캠퍼스를 기반으로 우수 해외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
  - 2023년 6월에는 인천 연수구에 재외동포청을 유치함으로써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8월에는 '인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개선 및 주거·의료·교육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재 관련 정책은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외국 전문인력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이에 인천시에서는 지역의 이점 및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체류 우수인재의 활용 및 정주여건 개선, 해외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 등에 집중하여 수요자 생애단계 맞춤형 정책을 발굴·시행할 필요
  - 인천시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한국어 및 문화 교육 지원 △학비 및 생활비 장학제도 마련 △취업연계 인턴십 제도 시행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 유학인재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생활·취업지원책이 필요
  - 교수, 연구원, 개발자 등 고학력·전문직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고급 해외인력의 인천시 체류 기간 장기화를 위해 주거·금융·복지 등 생활지원,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의 마련이 요구
  - 우수 재외동포 인력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과 연계하여 △재능있는 해외동포의 인재풀 확대 △국내 취업 방법 안내 및 취업 연계 △동포 차세대를 위한 교육·장학사업 마련 등 방문 정착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

## 제조 &gt;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2023년 8월 기준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28.4%, 5.2% 증가하여 수출 호조를 기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의 생산량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나 내수 판매량은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세<sup>10)</sup>
  - 8월 국내 차량 신규 생산은 공급망 차질 해소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한 31.2만 대를 기록하며 수출을 뒷받침하였으며, 차량생산 업체별로는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의 생산량이 크게 확대
    - 내수의 경우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종료<sup>11)</sup> 및 수입차 판매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하였는데, 현대차 및 기아를 제외한 모든 업체의 내수 판매량이 약 10% 전후로 크게 감소
  -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수출량 증가<sup>12)</sup>와 더불어 유럽 및 북미에서의 판매호조의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대비 18.5%, 자동차 수출액은 28.4% 증가
    -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대수는 전기차가 전년동월대비 61.2% 증가한 24,485대로 가장 많았으며, △하이브리드(23,63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5,261) △수소차(6) 순

[표 1]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 내수판매, 수출 추이

(단위 : 대, 억\$)

구분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생산 (증감률)	306,738 (13.2)	343,575 (30.2)	409,806 (35.6)	382,265 (24.7)	382,129 (24.5)	370,284 (12.8)	352,972 (8.7)	311,959 (9.7)
내수 (증감률)	116,565 (4.7)	147,031 (19.6)	165,851 (19.6)	149,374 (4.3)	152,190 (4.6)	162,699 (11.4)	136,089 (-5.0)	130,667 (-0.7)
수출 (증감률)	200,825 (11.8)	222,934 (34.8)	262,341 (48.0)	247,399 (25.7)	248,755 (36.0)	241,924 (39.8)	228,976 (2.4)	199,214 (18.5)
수출액 (증감률)	49.8 (21.9)	56.0 (45.8)	65.2 (64.2)	61.6 (39.9)	62.0 (49.5)	61.3 (58.1)	59.0 (14.9)	52.9 (28.4)
부품수출액 (증감률)	17.3 (-16.2)	20.2 (13.3)	20.6 (-5.6)	19.1 (-1.8)	19.4 (-1.0)	19.9 (5.9)	20.2 (-0.3)	19.1 (5.2)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3.09.19)' 참고 및 재구성

\* 주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표기

10)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3.09.19)'.

11)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종료로 인해 신규 자동차 구매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기존 3.5%에서 5.0%로 증가.

12) 승용차 기준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월대비 29.4% 증가한 58,383대, 수출액은 47.8% 증가한 18.0억 달러.

- **(전국)** 2023년 8월 기준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8% 상승한 115.9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1.8% 증가한 72.0억 원을 기록
  - **(생산지수)** 전국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전월대비 8.5% 감소한 115.9로, 자동차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있던 2022년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나 2023년 3월 이후 낮아지는 추세
  - **(품목별 수출액)** 국내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1.8% 증가, 전월대비 9.2% 감소한 약 72.0억 원으로, 승용차, 화물자동차, 전기차 등을 포함하는 완성차의 비중이 약 73.5%, 자동차부품 비중이 약 26.5%를 차지
    -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모든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화물자동차 및 특장차<sup>13)</sup>를 제외한 부문에서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
    - 자동차산업의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전기차(87.0%) △화물차(45.8%) △승용차(19.4%) △기타 자동차(14.4%) △특장차(7.6%) △자동차부품(5.9%) 순
- **(인천)** 2023년 8월 기준 인천지역의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104.2로 전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1.4% 증가한 약 5.4억 달러 수준
  - **(생산지수)** 인천의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전월대비 16.2% 감소한 104.2로, 전국지수에 비해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
  - **(품목별 수출액)** 인천의 자동차 관련 수출액 비중은 완성차 비중이 약 80.6%, 자동차부품이 약 19.4%로 세부 부문별 수출액 추이가 대체로 전국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전국 추이에 비해 큰 폭으로 등락
    - 화물자동차 및 전기차의 수출액이 전월대비 각각 25.3%, 118.6% 증가하며 수출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두 부문을 제외한 부문에서는 전월대비 감소
    -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특장차(104.6%) △화물자동차(53.7%) △승용차(15.1%) △기타 자동차(-16.2%) △자동차부품(-2.2%) △전기차(-1.1%) 순

[표 2] 국내 자동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지역	항목	'23.05	'23.06	'23.07 (p)	'23.08 (p)	'22.08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자동차 제조업	136.0	132.0	126.6	115.9	107.5	-8.5	7.8
인천	자동차 제조업	138.1	135.0	124.3	104.2	100.4	-16.2	3.8

\* 자료 :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의 자료를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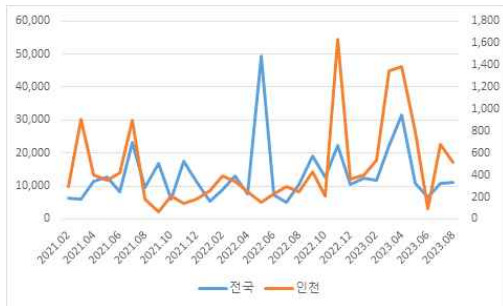
13) 특장차에는 소방차, 탱크로리, 차량운반차, 냉동탑차 등을 포함.



[승용차(MTI7411)]



[화물자동차(MTI7412)]



[특장차(MTI7413)]



[전기차(MTI7414)]



[기타 자동차(MTI7419)]



[자동차 부품(MTI74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2 : 2021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승용차로 구분되었으나, 2022년부터 해당 기종이 기타 자동차로 분류되며 전국 및 인천 지표의 변동 확대

[그림 1] 자동차 품목별 수출 동향(2023.08)

[ 부록 ]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3.08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21.1	1.4	96.5	1.0	210.1	40.7	142.9	-12.8	143.4	-14.6	142.0	-5.1
자동차	115.9	7.8	112.8	6.8	119.8	25.7	104.2	3.8	103.6	15.4	143.4	16.8
기계장비	96.0	-12.7	95.7	-12.3	152.1	18.2	121.1	-24.9	117.3	-24.7	223.0	99.5
바이오-의약	139.0	22.9	122.7	7.8	-	-	230.0	70.7	124.5	13.2	-	-
바이오-화장품	87.1	-1.7	92.4	1.9	100.9	-12.4	102.0	-6.0	93.7	-9.2	121.5	16.9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공공		민간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18,868	-40.6	52,428	-63.1	1,576	-34.1	1,487	-83.3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당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산업 &gt;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확대 방안 발표



#환경부

- 환경부는 전기승용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공개
  -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으나 전기승용차 보급은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
  - 차량가격이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구매가 5,700만 원 미만 전기승용차의 국비보조금을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확대하여 최대 78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
    - 또한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간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역시 추가적인 전기차 구매지원을 제공
    - 동 지원방안은 9월 2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

## 주거 &gt; 정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 정부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12만 호 추가 확보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부동산 PF대출 보증규모 10조 원 확대 △비(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
  - 기획재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향후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분야 주택공급을 통해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 주택사업의 여건을 개선할 계획

분야	주요 내용
공공주택 12만 호 추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신도시(3만 호), 신규택지 조기발표(8.5만 호), 민간 물량 공공 전환(5,000호) 등을 통해 공공주택 12만 호 추가 확보</li> <li>•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공분양(7.6만 호), 공공임대(3.5만 호) 조기 공급</li> </ul>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단, 별매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 금지는 유지)</li> </ul>
부동산 PF대출 보증 규모 10조 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확대</li> </ul>
비(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부문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사업비 지원(7,500만 원 한도)</li> </ul>

#해양수산부

- 정부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기업육성 및 산업화 촉진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및 성장기반 마련 등의 추진 전략을 포함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
- 세계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시장은 연평균 8%씩 성장해 2027년 1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수출기업 육성과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

분야	주요 내용
기업육성 및 산업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신산업 펀드’를 활용한 창업·중소기업 자금 지원</li> <li>• 기업의 연구인력 및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li> <li>• 선박 디지털화에 따른 디지털 등급 기준, 인증 절차, 데이터 통신 표준체계 등 기술적·제도적 토대 마련</li> <li>• 디지털 핵심기술(42개) 확보 및 상용화 서비스(39개) 개발</li> </ul>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및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li> <li>• 다국적 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 관련 비용 지원</li> <li>•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기회 제공</li> </ul>
산업생태계 조성 및 성장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li> <li>• 디지털 선박건조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및 민간 금융 금리우대 제공</li> <li>• 차세대 장비 등 연구개발 및 디지털 선박 운용 전문인력 양성</li> </ul>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청년의 수산업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의 2024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700만 원으로 편성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은 어촌의 청년 일자리 부족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의 수산업 창업 및 어촌 정착에 따른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은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명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을 300명까지 확대할 계획
- 지원사업 대상자는 수산업(어업·양식업, 유통·가공업)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 또는 예비 청년 창업자로, 1인당 월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최장 3년 동안 지원할 계획
  -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
  - 또한 지원사업 대상자의 취업 활동 제한 요건인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 가능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여,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 견인을 위해 ①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②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③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방안 ④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등을 논의
  -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에 따라 모빌리티, 에너지, 소재·부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 수출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
    - 수출 대상 지역별 수요 특성에 따라 △전기차·충전기, 항공·로봇, 건설기계(중동·아시아) △풍력발전 기자재, 수소연료전지, 플랜트(북미·유럽·중동) △이차전지, 탄소섬유·중간재 등 첨단소재·부품(미주·유럽) 등을 주력 수출할 계획
  - 해외 플랜트 수주와 관련해서는 경제외교를 바탕으로 하는 신(新)중동붐을 가시화하고, 수주 국가를 아시아·아프리카 등으로 확산시켜 올해 300억 달러 이상의 수주목표 달성을 추진할 방침
  - 한편 소비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해외 지재권 분쟁의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해외IP센터를 통한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국 확대(11개→40개)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지재권 침해 피해 발생 시의 분쟁 대응 원스톱 지원 강화 등을 수행할 예정

#기획재정부

-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모빌리티 등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 이차전지 제조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안전기준을 완화한 '이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신설
    - 현행법상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공장 건설이 지연 및 비용 부담 증가의 문제가 있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대해 '이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신설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설비 투자를 지원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시설과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의 변경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설 공사에 따른 전체공사-소방공사 통합발주를 허용
  - 모빌리티 혁신 기술·서비스의 실증 검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는 10월 중으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지원할 계획
    - 또한 실증사업 등을 통해 주유소 내에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기준을 일원화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포함한 스마트 실증사업을 승인
  -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해외 도시에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경험을 공유하여 해외-국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년 간 약 41개 사업을 지원
  -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①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사업선정)하고, ②정부 간 공동위원회 및 양자면담 등의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 진행을 공유(사업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할 계획
  - 또한 혁신기술·서비스의 도입에 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도 심의·의결
    - 금번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업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대구 중구)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새벽배송 및 방법서비스(경기도 수원) △레이더 기반 다방향·감응식 방향주의 알람 서비스(서울시 양천구) △CCTV및 차량 라이브뷰 영상을 활용한 AI 도로안전 모니터링(강원도 춘천) 등
    -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될 예정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부모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할 계획
  - 2022년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
    - 기본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데 비해 지급률이 높아, 제도 시행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만큼 남성 육아휴직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금번 개편을 시행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특례의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 대상 자녀의 연령 역시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18개월 이하로 확대
    -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매월 50만 원씩 단계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를 월 최대 200만~300만 원(기존)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 원(개편)으로 인상

## 참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외국인재 유치 현황과 시사점」, 2014.08.25.
-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2022.12.08.
- Education USA, “Joint Statement Of Principles In Support Of International Education.
- THE WHITE HOUSE,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ctions to Attract STEM Talent and Strengthen our Economy and Competitiveness”, 2022.01.21.
- Australian Government, “Visa for Innovation”.
- ANERKENNUNG IN DEUTSCHLAND, “Immigration made easier”, 2023.08.08.
- German Embassy Singapore, “Blue Card EU(highly qualofied employ)”, 2021.04.21.
- The Federal Government, “The new Skilled Immigration Act at a glance”.
- THE GOVERNMENT OF JAPAN, “Points System Aims to Attract Foreign Talent to Japan”.
- NIKKEI Asia, “On topic: Japan joins Asia race for global talent”, 2023.06.17.
-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 much do you know about talent visa (R visa)?”, 2018.03.28.
- Government of Canada, “Canada’s Tech Talent Strategy”, 2023.06.27.
- OECD, 「Talent Attractiveness 2023」, 2023.03.
- 이민정책연구원, 「OECD 인재유인지표와 한국에의 시사점」, Issue Brief, 2023.04.
- OECD, 「Measuring and assessing talent attractiveness in OECD countries」, 2019.
- OECD, “How di OECD countries compare in their attractiveness for talented migrants?”, 2019.05.19.
- OECD, “What is the best country for global talents in the OECD?”, 2023.03.29.
- OECD, “What are the top OECD destinations for start-up talents?”, 2023.03.30.
- 대한민국 법무부(<https://www.moj.go.kr>).
- 법무부, “법무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 개소”, 2021.12.23.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 성과와 향후 계획”, 2023.09.13.
- 법무부, “법무부-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2022.04.19.
- 법무부, “법무부,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시범 실시”, 2022.07.25.
- 서울Pn(서울신문), “외국 인재 명당...지역특화형 비자로 전북 400명, 경북 229명 유치”, 2023.02.09.
- 법무부, “법무부,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2022.08.05.
- 법무부,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 등 제도개선,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에 나선다!”, 2022.12.28.
- 교육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 2023.08.16.
- 법무부, “①숙련 인력, ②유학생, ③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2023.08.24.
- 노동연구원,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2014.12.

- 매일경제, “[사설] 공들여 유치한 해외 인재 세금 폭탄으로 내쫓는 한국”, 2020.12.12.
- 매일경제, “韓 외면하는 ‘외국인 고급두뇌’…稅혜택 늘리고 국제학교 확충을”, 2023.06.18.
- 이민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기 지역의 인력수요 대응과 이민정책과의 연계: 경남창원스마트그린산단 사례 연구」, 2022.12.
- 서울연구원,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고용 영향과 과제」, 2022.04.18.
- 재외동포재단, 「우수 재외동포 인재의 국내 진출 활성화 방안」, 2017.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청·스위스 바젤 투자청, 바이오 글로벌 협력 방안 논의”, 2022.09.29.
- 인천광역시, “국내 최초의 글로벌 교육허브, 인천글로벌캠퍼스 창립 10주년 행사 개최”, 2022.10.20.
- 인천광역시, “협업체 발족·4대 전략 추진…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본격화”, 2022.10.27.
- 인천광역시, “영어통용도시·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추진 지원 방안 등 모색”, 2023.05.15.
- 인천광역시, “글로벌 인재 확보 네트워크 구축·매칭에 최선”, 2023.06.22.
- 인천일보, “재외동포청 품은 인천, 동포 처우개선 나선다”, 2023.08.29.
- KISTEP,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정책 동향 및 방향 도출」, 2013.12.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확대…최대 680만원 → 780만원으로”, 2023.09.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 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공공 12만호 추가·패스트트랙 가동”, 2023.09.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2027년까지 42개 핵심기술 확보”, 2023.10.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 어촌정착 지원 내년 예산 25억 원 편성…올해보다 31% ↑”, 2023.10.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로 하반기 수출 증가 견인”, 2023.10.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차전지 특화 ‘안전기준’ 마련…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023.10.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 맞춤형 지원…제안서 상시 접수·사전컨설팅 도입”, 2023.10.0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2023.10.06.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3호(2023.10.13)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10월 13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http://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